

##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필요성과 방안 모색

차 인 순\*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정책 의제로 제시된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02년 국회의 결의안과 2003년부터 시작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한다면 성 인지적 예산편성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진행되어 왔어야 했다. 그러나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함에 따라 제도화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성 인지적 예산이 단지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분석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예산과정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성 인지적 예산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성 인지적 예산 제도화의 국내외적 필요성과 예산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예산과정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실제 정책 작업 과정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예산원칙에 성별 형평성을 포함할 것과 성 인지적 예산·결산 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성 인지적 예산, 성 인지적 예산분석,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성 인지적 성과지표, 성 인지적 국정감사, 국가재정, 예산원칙

\*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 I. 문제의 제기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예산이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인해 성차별을 유지시키고 있거나 혹은 개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Budlender & Sharp, 1998). 예산이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1984년 호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호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과 예산(women and budgets)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작업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호주의 경험이 유엔에 알려지면서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성 인지적 예산이 본격적인 국제적 아젠다가 된 것은 1995년 성 주류화를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채택한 북경 세계 여성 회의에서였다. 이후 전 세계 50개 이상 나라에서 지금까지 의회, 정부,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성 인지 예산 분석과 활동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 인지 예산이 이미 정책의제로 제기되어 온 바, 2002년 11월 국회에서 『성인지적예산편성및여성관련자료제출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0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성 인지적 예산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 인지적 예산은 사실상 담보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 인지적 예산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여성단체와 학계에서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활동과 연구를 시작하고, 국회 여성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3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안으로서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지만 그 논의가 여성의 관심사안 정도로만 인식될 뿐이다.

둘째, 성 인지적 예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주축이 되고, 여성부가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에

서는 아직 이 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째, 성 인지적 예산은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작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 인지력을 요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나, 구체적인 현안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이 되어 있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결의안 이후 여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 인지적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계속되었지만,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정책 의제로 제시된 성 인지적 예산을 정책 작업으로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이를 실행에 옮기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의지의 표명만이 아닌 별도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성 인지적 예산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 성 인지적 예산은 단지 예산에 대한 성별 분석이 아니라 예산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성 인지적 예산은 여성들의 경험과 정책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성평등한 효과를 산출하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과정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성 인지적 예산이 제도화되어야 하는 국내 외적 필요성을 서술하고, 예산과정 속에서 성 인지적 예산을 제도화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 이를 최소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재정관련법안의 내용 속에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기존 논의 : 성 인지 예산의 개념과 방법

### 1. 성 인지적 예산의 개념 정의

성 인지적 예산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성 예산, 여성 예산, 성별 예산, 성 인지적 예산, 성 반응적 예산<sup>1)</sup>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외국의 문헌에서도 성 인지적 예산은 gender budget, gender sensitive budget, gender budgeting, gender aware budgeting, gender responsive budget 등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여 왔다. 성 인지적 예산 활동을 펴고 있는 영연방국가들(Commonwealth) 쪽에서는 성 반응적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최근 EU 자료에서는 gender budgeting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유럽의회의 정의에 따르면,

성 인지적 예산은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에 대한 성별평가,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그리고 세입과 세출의 재구조화하는 것이다.<sup>2)</sup>

이는 론다 샤프(Rhonda Sharp, 2003)의 성 인지적 예산의 3가지 핵심 목표의 설명과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3가지 목표 중 하나는 예산과 정책이 젠더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실제 예산의 형태로 표현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며, 세 번째로는 실제로 예산과 정책이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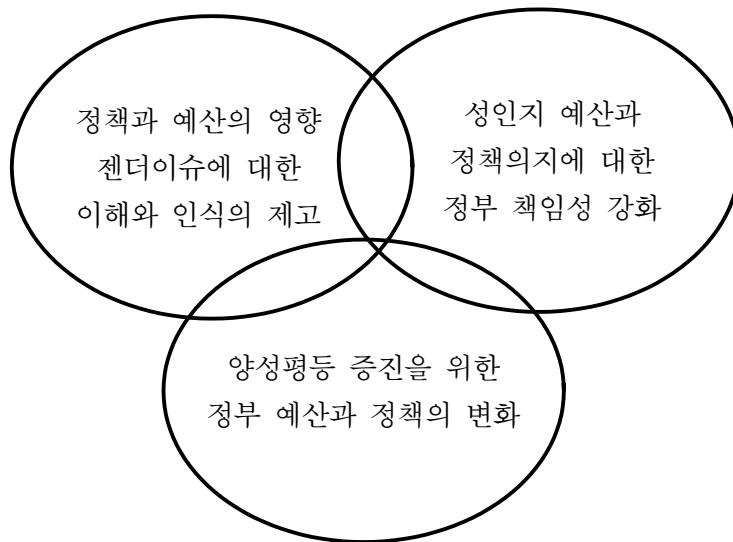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과

1)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성 인지적 예산 논의가 성 반응적 예산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그 동안 정부가 연구용역과 시범 사업을 통해 일관되게 사용해 온 ‘성 인지적 예산’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in [www. gender-budgets.org](http://www.gender-budgets.org), Nordic Council of Ministers Project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여기서의 전제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것이 반드시 양성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 과정을 볼 때, 여성과 남성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예산의 수혜가 남녀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왔지만 정말 성불평등 효과는 없는지 실제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림 1> 성인지적 예산조치의 세 가지 핵심목표



(Rhonda Sharp, 2003, figure1.1)

또한 정부의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과정의 각 단계 속에서 성 인지적 관점과의 통합을 정책 작업화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때에 제도적 장치는 특정 여성정책 부서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성 인지적 예산이 전 부처에 걸친 현안이기 때문이다. 성 인지적 예산의 핵심은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need)가 가시화되고 이에 기반

하여 차별의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 예산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입에서부터 결과까지 예산 전반에 걸친 분석이 정책 작업화 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변화가 보여져야 한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성 인지적 예산은 성 인지적 예산분석, 성 인지적 예산정책 기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 인지적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 2. 성 인지적 예산 분석

성 인지적 예산분석과 성 인지적 예산은 이렇듯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성 인지적 예산 분석이 세입과 세출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라면, 이러한 분석을 포함한 성 인지적 예산은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좀 더 능동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에서의 성 인지적 예산은 성 인지적 예산 분석이라는 부분적인 시도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2.1 적용 범위와 분류

성 인지적 예산 분석은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를 대상으로 해왔다.

세입 부분은 주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져 왔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분석에서 간접세는 빈곤층과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가 이에 해당한다.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는 모성 보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여성들만이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일부 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출 부분은 중앙과 지방, 부처별 혹은 사업별로 등 다양하게 검토되어왔다. 성 인지적 예산 분석을 중기 계획에 걸쳐서 시행하는 일부 나

라에서는 중앙의 전 부처의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달리 한 사업을 깊이 분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또한 예산을 예산회계법 상의 장·관·항 식의 분류와는 다르게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류하여 성 특정적 예산, 성 평등적 예산, 일반 예산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성 특정적 예산은 예산 사업이 여성 혹은 남성 등 특정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성 평등적 예산은 양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일반 예산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예산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성 특정적 예산은 임신부 검진이나 출산휴가 여성인적자원개발 예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처럼 특정 성과 관련된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성 평등적 예산은 남녀차별의 개선이나, 보육 예산, 고용평등관련 사업 예산처럼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예산이다. 일반 예산은 외관 상 특정성이나 양성평등 정책과 무관해 보이는 국방, 교통, 환경,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책 일반에 사용되는 예산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범위를 고려할 때, 성 특정적 예산과 성 평등적 예산을 합하여 여성정책 예산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 예산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2001년에 보건복지부가 용역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었으며, 2003년에는 여성부가 시범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 예산을 이 틀로 분석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성 인지적 예산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 일반 예산의 범주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들이다. 2005년 예산 구성을 보면 성 특정적 예산과 성평등적 예산은 전체 예산의 0.5% 미만이며 일반 예산이 9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99.5%에 해당하는 예산이 성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일반 예산에 대한 성별 분석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새로운 성 특정적 예산 사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성 평등적 예산 사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3가지 범주는 장기적으로 성 인지적 예산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는 유용해 보이나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예산의 몫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 인지적 예산으로서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성특정적 예산의 경우, 여성 혹은 남성에게 쓰여지는 예산이라는 성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발전정도에 따라 범주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출산 휴가, 육아휴직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정책을 위한 예산이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특정적 성격을 띠어 왔지만, 부성 휴가 개념의 도입이나, 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예산이 도입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산 사업은 더 이상 성별 구분에 의한 성특정적 예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한 예산 사업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를 분류하는 것 보다는 해당 예산 사업에 대한 성별 분석이 더 필요하고, 유용하다.

### 3. 성 인지적 예산 분석의 도구

성 인지적 예산과 관련된 각종 문헌에서 제시되는 성 인지적 예산 분석을 위한 도구들은 대체로 다음의 7가지로 나타나고 있다.<sup>3)</sup>

도구1(정책평가)	부문별 공공지출에 대한 성 인지적 정책 평가
도구2(수급분석)	공공지출 수급에 대한 성별 분석
도구3(수혜자평가)	공공 서비스 전달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성별 수혜자 평가
도구4(시간사용분석)	예산이 시간사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별 분석
도구5(세금분석)	세금에 대한 성별분석
도구6(보고서)	성 인지적 예산 보고서
도구7(중기재정계획)	성 인지적 중기 거시경제정책틀
도구 1(정책평가)은 예산 사업의 성별 영향을 개괄적으로 평가하는 방	

3) 김경희(2003), Bulender & Rhonda Sharp,(1998), European Women's Lobby(2004), 등 참조. 각 문헌에서 나타난 도구들의 명칭을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의역하였다.



법이다. 특정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성불평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지에 주목한다. 특정 정책의 예산 구성, 예산 사업의 내용, 예산 사업의 목표와 실제 집행 결과 사이의 괴리, 정책의 효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영향들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국내 사례는 앞서 제시한 부처별 예산 분석과 여성단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별 분석, 그리고 주제별 분석 등이 있다. 2004년도에는 한국여성장애인 연합의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 분석, 한국여성민우회의 보육 예산 분석, 그리고 전국여성농민회 전북연합의 농촌 여성 정책 분석 등이 시도되었다.

도구 2(수급 분석)는 공공 지출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얼마만큼 할당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 사용 금액을 수혜자 여성, 남성의 수로 나누어 평균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성별 수급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도된 것이 2003년 여성부 용역보고서 중 김경희(2003)의 연구이다. 김경희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을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A단계 : 고용보험 재직자 성별 비율 추출 (예: 60 : 40)

B단계 : 훈련 참여 성별 비율 추출(예: 70 : 30)

C단계 : 고용보험 재직자 성별 비율에 따른 훈련 참여자수 조정

70 : 30 ==> 60 : 40(남성 : 감소, 여성 : 증가)

D단계 : 조정에 따른 예산 재조정 요구

도구 3(수혜자 평가)은 여론조사나 태도 조사를 통해서 요구(need)나 개선 사항을 물어보는 방식이다. 현재의 공공 서비스 전달이 시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견을 수집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와 우선순위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도구 4(시간사용 분석)는 가사, 양육, 기타 보살핌 노동을 드러내는데

유용한 기법이다. 무급 노동이 갖는 거시경제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정부 예산과 가구, 지역 사회 등에서 사용되는 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무급노동의 화폐가치 환산, 시간사용조사, 가구총생산 위성계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통계청 자료는 여성부와의 지속적인 공동 작업을 통해서 성별 가사노동시간과 비율 등을 통해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왔다.

도구 5(세금분석)는 세금을 성별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세입 정책에서 성별 불평등은 없는지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가 이에 대한 최초의 시도이다.

도구 6(보고서)은 전체 공공지출과 부서별 지출이 가지고 있는 성별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성 인지적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 보고서의 형태를 띠 수도 있고, 예산(안)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도구 7(거시경제정책틀)은 중기 거시경제정책틀을 성 인지적 관점과 통합시킴으로서 경제 정책이 성별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기획예산처에 의해 중기재정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전체적인 성별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도구 1에서 5는 세입·세출 예산과 예산 사업에 대한 성별 분석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면, 도구 6과 7은 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정부가 연례적으로 예산 혹은 결산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과 중기적 경제정책계획이 미치는 성별 효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구 6과 7은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넘어서서 예산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sup>4)</sup>

4) 이외에도 영국 정부의 성 인지적 예산 보고 자료에는 여성정책부서 예산과 역할 분석, 성별 정책 요구분석, 성별 성과지표 분석, 공공서비스의 동등기회 수혜 분석 등 새로운 도구들도 제시하고 있다. HM Treasury, Dti, 2004

이러한 성 인지적 예산 분석은 예산단계마다 적용될 수 있다. 투입의 단계에서는 자원이 적절하게, 비례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목적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성취될 수 있는지, 집행의 단계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하고도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출의 단계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관련되는지, 결과의 단계에서는 정책의 다른 목적만이 아니라 양성평등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sup>5)</sup> 그런데 이러한 성 인지적 예산 분석 도구들이 자동적으로 예산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양성평등 효과를 내도록 만들려면 이러한 분석과 분석의 결과들이 예산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 기제가 필요하게 된다.

### III.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필요성

#### 1. <성인지적예산편성및여성관련자료제출촉구결의안>의 발전적 대안

성 인지적 예산은 여성발전기본법 상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양성평등이라는 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제10조 정책의 분석과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 의제로서 성 인지적 예산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계획인 제2차 여성발전기획계획에 포함되면서부터이다.

성 인지적 예산이 정책 의제로 형성되는 데는 NGO와 국회의 결의안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정책 예산분석을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 지역을 매년 확대해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8년부터 ‘여성 관련 예산’이라는 대안예산을 매년 간단히 발표해왔고, 2002년에는 국회 여성위원회에 ‘성 인지적 예산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현

5) HM treasury & Dti(2004), Rhonda Dharp(2003) 참조.

재 여성단체연합은 2002년부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정책 예산분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도 지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정책 예산 분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비록 시험적인 초기 단계의 분석이기는 했지만 정부를 상대로 여성정책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여성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여성정책의 화려한 구호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양성 평등목표와는 무관하거나 배치되는 사업들에 여성정책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여성정책 예산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미인대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성 상품화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쓰여 지는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sup>6)</sup>

국회는 NGO의 청원을 계기로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성인지적예산편성및여성관련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성 인지적 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이후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점검되어 왔다. 국회 여성위원회는 2002년 10월 24일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 2003년도 여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정 중 각 부처에 분산 되어 집행되고 있는 여성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예산의 성 인지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제234회(정기회) 국회 제14차 본회의(2002년 11월 8일)에서 의결되었다. 결의안은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하고 있다.

- ① 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
- ② 정부의 시정연설시 여성 관련 예산의 편성지침 및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
- ③ 각 행정부처는 여성 관련 예산의 현황 및 편성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여성부, 국회 여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

6) 한국여성민우회(2003), □□젠더, 예산, 여성운동□□

이러한 촉구 결의안의 내용은 성 인지적 예산을 예산 과정에 편입시키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정부로 하여금 성 인지적 예산안편성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시정 연설시 여성 관련 예산의 내용들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함으로써 예산안 편성의 차원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예산안 편성 단계만이 아니라 전 예산과정을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2. 국제적 아젠다에의 동참

1995년 북경 세계 여성 회의는 성 인지적 예산을 성 주류화의 기본적인 도구로 제시하면서 각국이 사회 각 분야에서 성차별이 개선되고 여성들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 그리고 예산에 성별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할 것을 요청하였다.<sup>7)</sup>

“ (북경여성) 행동강령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은 ..... 여성의 힘의 증진을 위한 인력 및 재정자원을 유용하게 하는 정치적인 공약을 필요로 한다. 이는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재정조달 뿐 아니라,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 결정에 성인지적 관점(gender-perspective)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북경 여성행동강령 VI. 재정적 조치 345절)

이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에 적절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반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예산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령

7) 북경 세계 여성회의 행동강령전략목표 H.2 , V. 제도적 조치 292, VI. 재정적 조치 345

으로 제시하고 있다.

“..... 행동강령의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은 각 국 정부에 있다. 이러한 목표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지출로 여성이 어떻게 이득을 보았는가를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지출에 남녀 동등한 접근이 보장되도록 예산을 조정하여야 한다.**”

(북경 여성행동강령 VI. 재정적 조치 346절)

이후 성 인지적 정책과 예산 분석은 2005년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의회, 정부,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결합의 형태로 성 인지적 정책과 예산 분석 활동을 발전시켜왔다.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영연방국가들(Commonwealth)<sup>8)</sup>, 유럽<sup>9)</sup>,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아시아 지역은 필리핀의 GAD예산 정책을 선두로, 2004년 7월에는 아시아 지역 work shop을 마친 상태이다.<sup>10)</sup>

국제기구로는 UNIFEM(국제연합 여성기금) 주도하에 성 인지적 예산에 관한 논의와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GRBI(Gender-Responsive Budget Initiative)<sup>11)</sup>, World Bank, OECD 등도 성 인지적 예산활동에 정보와 자료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특히 OECD는 2001년 5월 회원국 30개국에 성인지적 예산과 관련된 각국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요

8) 성 인지 예산 분석을 하고 있는 영연방 국가들로는 호주, 방글라데시, 바바도스, 벨리즈, 보스니아, 캐나다, 피지, 인도, 케냐, 말라위, 말레이시아, 마우리티우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세인트 키츠 & 네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영국,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 이다.

9) 프랑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불가리아,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등

10) 참가국은 한국, 일본,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몽고,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베트남 등 16개국이었다.

11) UNIFEM, the Commonwealth 그리고 캐나다의 국제개발연구소(IDRC) 연합의 형태로 운영. [www.gender-budgets.org](http://www.gender-budgets.org) 참조

청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각국이 얼마나 예산에 성별분석을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 설문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국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up>12)</sup> IPU 역시 2004년에 성 인지적 정책과 예산에 대한 소회의를 개최함으로써<sup>13)</sup>, 의회도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연합 여성기금(UNIFEM)은 2001년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성 인지적 예산에 관한 정부 고위급회의에서 2015년까지 모든 국가가 예산 과정에 성별 분석을 통합할 것을 요청하였다.<sup>14)</sup> UNIFEM의 요청은 각국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성 인지적 예산 분석과 활동이 국제적 아젠다인 이상, 많은 나라들이 관련한 보고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의 점검을 제안하는 보고가 있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여성 인권과 관련된 정부 예산의 역할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시작했고, 199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처음으로 동 위원회의 보고에 성 인지적 예산조치를 포함시켰고, 최근에는 프랑스가 동 위원회의 보고에 정부 예산에 대한 성별 분석을 언급했다.<sup>15)</sup>

### 3. 낮은 양성평등의 수준의 극복

매년 UNDP에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개발지수와 여성권한척도 사이의 간격이 큰 나라에 속한다. <표 1>에서와 같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지수를 일별하면, 여성개발지수는

12) OECD, 2001,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의 성별 영향과 예산 자료에 대한 토론
- \*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의 성별 영향에 대한 분리된 특별한 보고서.
- \*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에서의 성별 분리 자료의 사용가능성.
- \*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에 있어서 비정부기구와의 협조.
- \* 자료의 준비와 사용에 있어서 재무부, 각 부처 및 여성국 등의 역할.
- \*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고려.

13) [www.ipu.org](http://www.ipu.org)

14) [www.undp.unifem.org](http://www.undp.unifem.org)

15) Diane Elson(2005)

인간개발지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로 세계 30위권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권한척도는 최근 5년간에도 6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sup>16)</sup>

<표 1> 년도별 한국의 인간개발지수(1996~2004)

지 수	HDI (인간개발지수)	GDI (여성개발지수)	GEM (여성권한척도)	value (값)	정치 (의원)	행정 (고위직 공무원 %)	전문직 기술직 %	소득비 (성별임 금격차)
1996	29	29	78	0.282	2.0	4.2	45.0	27
1997	32	32	73	0.302	3.0	4.3	45.0	28
1998	30	30	83	0.292	3.0	4.4	31.9	29
1999	30	30	78	0.336	3.7	4.2	45.0	0.45
2000	31	31	<b>63</b>	0.323	4.0	4.7	31.9	0.45
2001	27	29	<b>61</b>	0.358	5.9	5	31	0.45
2002	27	29	<b>61</b>	0.378	5.9	5	34	0.45
2003	30	30	<b>63</b>	0.363	5.9	5	34	0.46
2004	28	29	<b>68</b>	0.377	5.9	5	34	0.46

\* UNDP, 인간개발보고서, 각년도

나아가 양성평등에 대한 최근의 다른 국가비교 보고서의 발표들도 유사하게 낮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에서는 58개국 중 54위로 나타났다. 이 보고는 여성경제활동참여, 경제활동기회, 정치, 교육, 보건, 복지 등의 항목으로 조사된 것이다.<sup>17)</sup>

16) 2004년도 지수에 산정된 데이터는 주로 ILO에 집계된 2002년도 통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2004년의 여성정치참여 13%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을 통제하고 이 수치를 반영했을 때에도 5계단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나아가 표 1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value(값)이 2003년 0.363에서 2004년 0.377로 올라갔어도 순위는 더 떨어지는 등 국가간 양성평등 발전정도가 비교되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7) 기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2005년 60개국 중 50위,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사에서 조사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보고>는 여성노동참가율, 학력, 관리직, 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종합평가한 결과 아시아 13개국 중 13위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국제 비교 보고들에서 나타난 한국의 양성평등의 수준은 양성평등 정책을 국가정책상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년까지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10%, 전문직 여성비율은 45%를 달성한다는 여성권한척도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2008년까지 2004년 현재 68위에서 35위권으로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T/F 팀과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국제비교 상 순위를 빨리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의 제고와는 다소 괴리될 여지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이 여성부만의 외침에서 국가 정책 전반에서 우선순위를 부여 받는, 무게 중심 이동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제기된다.

#### IV.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적 장치 : 외국의 사례

성 인지적 예산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의회가 주도적인 경우, 정부가 주도적인 경우,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경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혼합형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성 인지적 예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가진 몇 개의 국가들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필리핀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볼 때 성 인지적 예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의 5% 범위까지 성 인지적 정책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내 예산(안)의 편성과 결산 보고에서

18) 제3차 여성정책조정회의(2005. 5.27), 우먼타임즈, 2005.6.7.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제도화하고 있다.

필리핀은 예산관리부, 국가경제발전위원회 그리고 국가필리핀여성역할 위원회가 연합하여 중앙과 지방의 전 공공기관에 성 인지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고, 또한 이와 의거하여 각 기관의 성 인지 정책과 예산편성 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받고 있다.<sup>19)</sup> 필리핀에서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1995년 첫해에 19개의 공공기관이 계획서를 제출한데 비해 점점 증가하여 2002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137개의 공공기관(약 40%)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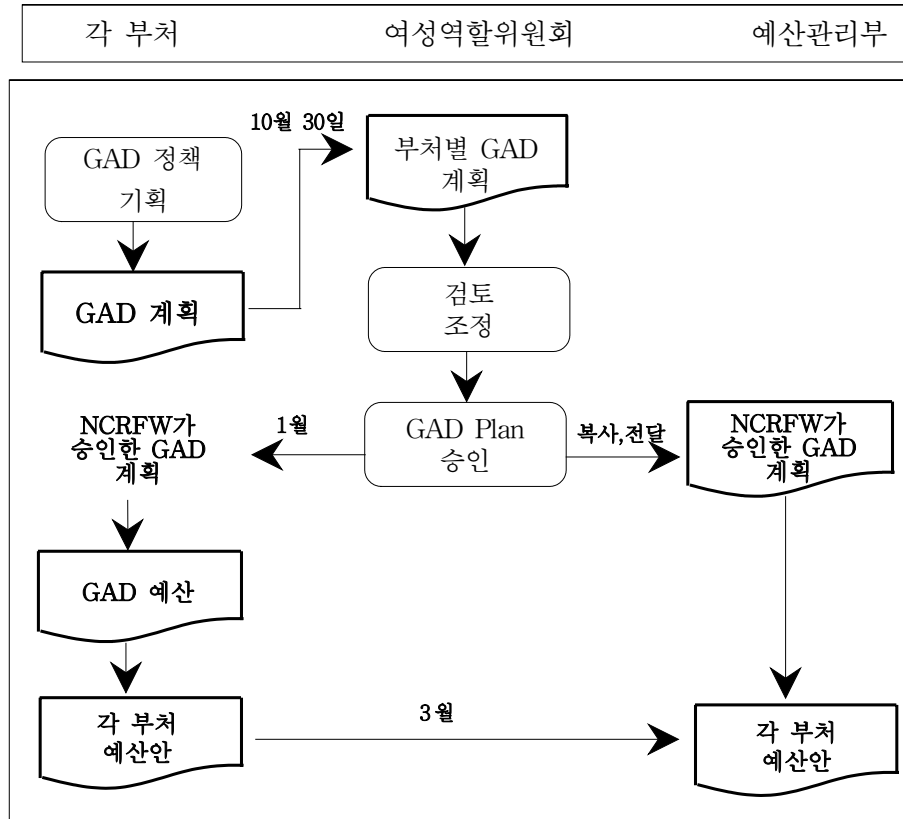
필리핀에서 GAD 예산 정책의 발전과정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에 제정된 여성과 발전법(Women in Development and National Building Act: Republic Act 7192)에서 GAD 예산조치가 처음으로 공식화되고, 1993년 라모스 대통령이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BM)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에 GAD 정책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지시함으로 본격적으로 GAD 예산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4년에 필리핀여성역할위원회(NCRFW)<sup>20)</sup>와 예산관리부(DBM), 국가경제개발청(NEDA)이 Joint Memorandum Circle(JMC) No. 94-1을 만들어 성별(gender)을 정책계획과 예산안에 통합시키는 정책 틀과 절차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제공해 왔다. 또한 1995년에는 예산법(General Appropriations Act: GAA) 제27조에서 모든 부서나 기관에 최소한 5%의 예산이 성별 이슈를 제기하는데 설계된 프로젝트를 위해 할당할 것을 위임하고 또한 NCRFW로 하여금 점검과 보고를 하게 하는 근거를 두었다.

19) 2001년에는 문서번호 Joint Circular no. 2001-1. by Dep. of Budget and Management,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 문서제목은 '기관의 프로그램, 활동, 프로젝트에 성주류화 및 제도화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Guidelines to Implement Gender Mainstreaming and Institutionalization in the Existing Agency's programs, Activities and projects) 이 시행되었다.

20)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 1975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필리핀에서의 GAD 예산정책의 추진 절차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GAD 예산정책 추진 절차 및 시간표



(DBM & NCRFW, 2002, 11, 그림3 재인용)

Joint Memorandum Circle(JMC)에서 각 부처에 GAD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면, 각 부처는 GAD 계획을 NCRFW에 제출하고 NCRFW는 이를 검토한 후 각 부처와 예산관리부에 보낸다. 이후 각 부처가 GAD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예산관리부로 보내면 예산관리부는 NCRFW에서 받은 GAD 계획과 GAD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우선순위 반영에 고려하게 된다. 여기서 NCRFW의 역할은

교육, 자료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GAD 계획과 예산안 편성을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각 부처와 기관이 GAD 계획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정책의 수행단계에서는 각 정부 조직의 GAD 정책 이행과 예산 사용을 점검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2. 프랑스

프랑스는 2000년 재정법률<sup>21)</sup>을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 부록으로 성별 분석 보고서(Yellow Paper)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것은 국회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1999년에 개정된 2000년도 재정법률 제 99-1172호 제132조는 ‘정부는 매년 재정법률 부록에서 여성 복지 지원에 관한 세출예산을 표시하는 현황을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으로 제출된 성별 분석 보고서는 프랑스 여성의 사회적 상태와 관련 부처들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현황 분석 자료이며, 동 보고서의 제출을 통해서 예산 지출과 양성평등과의 관계가 정례적이고 전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OECD, 2001).

이외에도 경제재정산업부는 2001년 5월 파리에서 열린 OECD 22차 고위예산관료 정례회의에서 “2001년도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예산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 <A Gender perspective on Budgeting>을 제출하기도 했다.

## 3. 호 주

호주의 경우는 1984년부터 성 인지 예산 분석이 담긴 <여성 예산 보고서(Women's Budget Statement)>를 발표해 왔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이

21) 프랑스는 예산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법률의 형태로 제출되고 심의, 의결된다.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전 노동당 정권 집권 시기 동안에는 총리실 산하 여성지위청(OSW)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각 부처의 예산안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sup>22)</sup> 1990년대 중반 이후 연방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으나, 개별 주 차원에서는 계속되었다. 일례로 2000/1 남호주주 예산보고서에는 부록으로 여성예산보고가 9면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북테리토리주는 Northern Territory in AU, *Women in the Budget* 2000/1를 발간했다. 현재 연방 차원에서는 가족서비스부 장관이 여성지위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매년 3월 <여성 예산 보고서>를 발행하고, 5월 경에 의회에 제출한다.

#### 4. 영 국

Women's Budget Group은 재무부에서 성 인지적 예산에 관련된 GO/NGO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회의의 결과로, 예비 예산분석과 거시경제와 성 인지 예산에 관한 자료를 발행하고 있다. 재무부의 지출지침은 모든 정부 기관에 성별 영향을 포함한 주요 지출 효과를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sup>23)</sup> 이외에도 2004년에는 재무부, 무역산업부, 고용연금부가 함께 해당 부처의 세출에 대한 성별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sup>24)</sup>

#### 5. 스웨덴

스웨덴은 매년 재정부가 정부 예산안의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배분에 대한 특별한 보고서를 만든다. 2002년 가을에는 전체 예산과정에 성별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하는 파일럿 프로

22) 호주의 여성지위청(OSW)은 2004년 10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총리실 산하에서 가족지역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로 이관되었다. 명칭도 여성청(Office of Women)으로 변경되었다.

23) European women's lobby, 2004

24) HM Treasury, Dti and DWP, 2004. 7.

젝트가 이루어졌다. 대상이 된 부서는 사회복지부, 지역개발부 그리고 교통부이며, 이는 재정부와 성평등 부서간의 협동의 결과이다.<sup>25)</sup>

## 6. 노르딕 5개국

노르딕 5개국(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장관회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성평등을 위한 협력행동계획에서 성 인지적 예산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노르딕 작업그룹이 만들어졌다. 노르딕 장관회의의 결정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사회부에서 노인보살핌 정책을, 핀란드는 보건사회부 전체 예산을, 아이슬란드는 사회부에서 장애수당프로그램을, 그리고 스웨덴은 정치영역 예산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 통합 문제를 다룬다.<sup>26)</sup>

## 7. EU

EU는 성 인지적 예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3년 5월, ‘여성과 남성을 위한 평등기회 자문위원회’는 성 인지적 예산에 관한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에 성 인지적 예산을 실행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과 도구 확정, 유럽 구조기금 지출에 대한 성별 평가, 유럽 예산 과정의 모든 부분에 성별영향평가, 국가 수준에서 성 인지적 예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자원 할당 등이 제시되었다.<sup>27)</sup> 나아가 2003년 6월 유럽의회 ‘여성인권과 평등기회위원회’도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개인 보고를 채택하고, 2004년 말까지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그룹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sup>28)</sup>

25) European women's lobby, 2004

26) in [www.gender-budgets.org](http://www.gender-budgets.org), Nordic Council of Ministers

27) European Women's Lobby, 2004

28) European Women's Lobby, 2004

## 8. 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5년부터 5년간에 걸쳐 중앙 정부의 전 부처와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해왔다. 여기서는 전 부처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중기재정지출계획에 성별영향평가를 통합하고 있다.<sup>29)</sup>

## V. 예산 과정에의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과제

### 1. 예산 편성 단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로는 성 인지적 예산편성 지침과 실제적 편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담당자에 관한 것이다. 각 부처 여성정책책임관에게 기관내 최종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작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기획예산처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각 부처가 성 인지적 예산 사업을 내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부가 전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이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의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는 성 인지적 예산 사업이 앞의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부처 총 수준과 사업별 수준에서 분석되고, 질문될 필요가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총괄적인 성 인지적 예산(안) 보고서를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록 등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성 의원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여성 의원 참여를 통해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심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sup>30)</sup>

29) HM Treasury, Dti and DWP, 2004. 7.

30) 2004년 11월 , 2005년도 여성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

## 2. 감사단계

성 인지적 감사(Gender Audit)는 논의의 초기에 성 인지적 예산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다.<sup>31)</sup>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결산에 대한 확인으로 예산과정에서 보면 결산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감사는 예산의 성 인지적 집행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다. 17대 여성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여성정책관련 감사를 실시했으며,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2004년 7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조직적으로 전 의원실에서 관련된 모든 상임위 국정감사에 성 인지적 국정감사를 포함시켰다.<sup>32)</sup>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여성의제가 여성위원회, 여성 의원에 국한되었던 것을 국회 전반으로 넓히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자체평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여성의제로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조세, 산업 등의 정책 등에 대해 성 인지적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중점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들에서 다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 인지적 감사라면, 여성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동시에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원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여성의원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제기하였고, 회의 이후 여성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 내용의 서한이 전달되었다.

31) Swirski, Barbara(2002), "What is Gender Audit", Information on Equality and Social justice in Israel, in [www.adva.org/genderbudgetsenglish.htm](http://www.adva.org/genderbudgetsenglish.htm). Krug, Barbara, "Gender Audit: Whim or Voice", WIDE, Brussel, Belgium, in [www.euro.org/wide/GM](http://www.euro.org/wide/GM)

32)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2004), □□여성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 2004년 민주노동당 여성국감백서



### 3. 결산 단계

#### 1) 정부의 결산 보고

정부는 결산 보고에서 성인지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제도는 2004년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이 마련되어 주요재정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해당 부처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sup>33)</sup> 성과관리제도는 예산 사용의 성별 효과와 이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중시하는 성 인지적 예산의 취지에서 볼 때, 주요한 제도로서 이를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2>는 정부의 성과지표에 대한 사례(시안) 이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시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적 통계를 수반하는 몇몇 사업의 경우, 성별 분리 자료나 성별분리통계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몰성적으로(gender - blind)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성과지표는 성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성과가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33) 기획예산처(2004),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참조. 성과관리제도는 사업과 예산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체계로 재구성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항목들로, 계량 측정이 가능한 것은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만족도나 분석 의견 등 수치화가 곤란한 것은 정성지표로 표현한다. 성과지표의 종류에서는 예산, 인력의 투입물량을 나타내는 투입(input)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 달성 정도나 산출물을 표시하는 과정(activity/process)지표, 사업 완료 후 1차적 산출물에 대한 산출(output)지표,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outcome)지표 등이 있다. 이 중 성과지표로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결과지표이며, 투입지표는 사업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육정책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투입지표는 보육예산, 과정지표는 계획대비 집행을, 산출지표는 보육 아동 수 증가율, 보육 서비스 만족도, 결과지표는 보육수요 충족율로 볼 수 있다.

&lt;표 2&gt; 주요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 사례 (시안)

부 처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환경부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자동차 공해개선	▪ 시내버스 배출가스 저감율 ▪ 천연가스자동차국민만족도
농림부	▪ 농지매매사업 ▪ 농지임대차사업 ▪ 농지교환분합사업	▪ 쌀전업농을 육성하여 쌀 생산유통의 중추로 육성	▪ 쌀전업농 생산비중 ▪ 3ha이상 농가증가율
농진청	▪ 축산기술 시험연구 ▪ 축산연구정보전산화	▪ 가축 유전자원 보전 및 형질전환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가축개량 신기술의 효과성 향상도 ▪ 우량종축 정보 보급실적
경찰청	▪ 자동차 면허관리 ▪ 운전 면허관리	▪ 양질의 신규면허 취득자 배출	▪ 면허취득후 6월 미만자의 교통사고율 ▪ 면허취득후 7월 미만자의 행정처분율
해경청	▪ 수상레저면허시험운영 ▪ 방법 2류가 구입 ▪ 음주측정기 확보 및 정비	▪ 효과적인 해상안전 관리체제 구축	▪ 수상레저인구 10만명당 안전 사고 감소율 ▪ 여객선·유도선의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실적 ▪ 해상교통 질서 확립(음주운전 단속건수)
산자부	▪ 외국인 투자유치 ▪ IKP <sup>1)</sup> 건립	▪ GDP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을 12년까지 14% 수준 확대	▪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 공장설립형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과기부	▪ 원자력 실용화 연구사업	▪ 원자력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원자력 기술선진국(G5)에 진입하고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기반확보	▪ 기술료 실시계약 건수 및 징수액 ▪ 시제품 개발건수 ▪ 실용화 사업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 ▪ 실용화 신청 기업수
복지부	▪ 보건의료연구개발 ▪ 보건산업기술이전 ▪ 보건산업해외박람회	▪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건수 ▪ 기술이전 성사 건수 ▪ 수출상당건수 및 계약액
정통부	▪ 대학IT교육여건개선 ▪ IT인력 저변확대	▪ IT전문인력 양성	▪ SCM <sup>2)</sup> 배출인원 ▪ 고급IT인력배출인원 및 지적

부 처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연구인력양성</li> <li>▪ IT특성화기술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권 건수</li> <li>▪ IT특성화기술인력 양성인원</li> </ul>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T<sup>3)</sup> 국제출원</li> <li>▪ 국제출원비용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T 국제출원건수</li> <li>▪ 국제출원비용 지원율</li> <li>▪ 국제출원비용지원대비 해외등록건수</li> </ul>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지진 기술개발</li> <li>▪ 기상연구소 기관고유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연구 역량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기술연구개발성과(논문게재)</li> <li>▪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뇌 한국 21 사업(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국제적 수준 선진연구인력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I<sup>4)</sup> 게재 논문수, 특허기상기술연구개발성과(논문게재)</li> <li>▪ 특허취득건수</li> <li>▪ 지역대학 산업체 취업률</li> </ul>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게임 사전제작지원</li> <li>▪ 캐릭터 상품소재 개발지원</li> <li>▪ 우수애니메이션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산업 창작 및 제작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작품 사용화율</li> <li>▪ 지원작품 매출액</li> </ul>

주. 성과목표는 좌측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임.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1. IKP (Invest Korea Plaza)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창업보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공간
2. SCM (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 관리
3.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4. SCI (Science Citation Indicator) : 과학분야 연구논문게재지수

성과지표가 성별로 구분되어 제시된다면 여성과 남성에게 예산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보이는지 일차적으로 파악될 것이고, 이를 통해 세부적인 현안이 도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림부 사업에서 쌀 전업농의 성별 비율이나, 정책이 지원하고 있는 3ha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게 되는 농민의 성별 비율을 성과 지표상 알 수 있다면, 현재 농업노동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농민에 대한 예산 지원과 연계시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는 정보통신부의 고급 IT 인력을 성별로 구분하여 보게 되면 정보화사업의 성별 영향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지원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한국 21 사업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게 되면 두뇌한국 21 사업의 예산이 성별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파악됨으로서 성별 형평성을 위해 사업과 예산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과 지표가 인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별 분리 정보나 자료를 통해서 각 사업의 예산이 성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성별 변수를 첨가하는 것은 예산의 사용을 성 인지적으로 만드는데 일정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성과지표에 성별 변수를 첨가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얼마나 형평성 있게 전달되고 있는지, 양성평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과 평가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성 인지적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2) 결산 심의

전용, 이월, 불용 등 회계중심의 결산 심의에 더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성 인지적 예산 분석 도구들을 활용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성별 성과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를 성별로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과 시정요구 사항에서 부대의견 등의 형식으로 성별 성과를 제출하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적하는 방법이 있다.<sup>34)</sup> 정부로 하여금 성 인지적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성 인지적 결산검토를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4) 결산심사 결과의 시정요구권은 국회법 제84조 ②항.

#### 4. 국가재정 관련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상과 같은 예산 과정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강력히 요구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2년 11월 촉구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국회 여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성 인지적 예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여성부가 2003년에 시범사업과 용역을 수행한 것 이외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의회에서의 성 인지적 검토 및 분석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성별 분리 자료에 기초한 예산안·결산(성과) 자료를 상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성과 계획과 성과 결과 보고 그리고 다양한 성과지표에 성별 분리 지표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산 수립과 집행의 성별 불평등 효과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분리통계 자료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 13조 ③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전체 예산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성 인지적 예산과 관련된 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의 설치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재정 관련법안에서 다루는 것이 성 인지적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는 예산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한 법률안이기 때문이다.

2005년 4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전체 예산 체계와 관련된 재정관련 법안들<sup>35)</sup>의 내용에서 성 인지적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원칙, 예산안 첨부서류, 결산의 국회 제출에 대한 것이다.

35) 정부는 새로운 재정운용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 예산 자율편성, 성과 관리 등 새로운 재정제도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2004.10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 12.6 제안된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이 있다.

## 1) 예산 원칙

국가건전재정법안의 제3조 예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3조(예산원칙)** 정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재정전망, 재정건전성판단, 재정정책 수립 및 재정통계의 작성에 있어서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예산원칙은 정부의 책임성, 성과, 투명성, 참여 등을 명시한 것으로 좋은 통치방식(good governance)의 요소와 일부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통치방식에서 논의되고 있는 요소들 중에는 위의 예산 원칙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도 형평성(equity)이 있다. UNDP는 1990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통치의 논의에서 성별 형평성을 포함시켜 왔으며, 유럽에서는 성 인지적 예산을 좋은 통치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sup>36)</sup>

앞서 논의한 우리 사회에서의 성 인지적 예산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면 예산 원칙에 성별을 포함한 형평성의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때에 성별 형평성은 예산 과정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36) European Women's Lobby, 2004, UNDP(1997), 'Good governance -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n UNDP, Governanc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http://magnet.undp.org/htm/policy/chapter>

## 2) 예산안 첨부서류

국가재정법안 제30조와 국가건전재정법안 제38조 상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의 종류에 부록 혹은 별도의 보고서 양식으로 “양성평등 또는 성 인지적 예산보고서 제출”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다.

## 3) 결산의 제출

결산에서도 정부로 하여금 성 인지적 결산 보고서를 부록 또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안 제53조(결산의 국회제출)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성평등 또는 성 인지적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는 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국가건전재정법안은 제64조에서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보여 지고 국회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이 성과보고서에서 ‘양성평등 또는 성 인지적 성과 보고’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I. 맺음말

이 글은 성 인지적 예산이 단지 특정 예산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만이 아니라 예산 과정 전체와 관련된 것이며,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성 인지적 예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성 인지적 예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예산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 관련 법안에 법적인 근거를 담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예산 원칙에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의미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정부로 하역금 예산안 제출시에 성 인지적 예산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결산시 성 인지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예산 과정 전반을 성 인지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성 인지적 예산안 및 결산/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고가 시, 군, 구 차원에서부터 성별 분리통계에 기초하여 수집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정책 작업과정에서 성별로 분리된 정보, 자료 및 통계 등을 촉진하는 부가적 효과도 수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보다 상세하고도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또한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 인지적 예·결산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국가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매년 점검될 수 있으며, 성별 불균형의 문제를 지속적이고도 실효성 있게 개선시켜 나감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양성평등의 수준도 상승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국회 여성위원회(2002).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 2002.11.5.
- 국회 여성위원회(2002). 여성관련예산정책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2002. 10.
- 국회 여성위원회(2005). 성 인지적 예산 간담회. 자료집.
- 기획예산처(2004).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2004. 5
- 김경희(2003). 성 주류화와 성 인지적 예산분석의 개념. 한국여성민우회편, □□젠더·예산·여성운동□□
- 김경희 외(2003). 성 인지적 예산분석 지침 수립방안 연구. 여성부 연구보고 2003-14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2004). 여성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 2004년 민주노동당 여성국감백서
- 서울시 교육청(2002). 2003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2002.8
- 여성부(2004). 4개부처 “성 인지 예산” 시범분석-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노동부. 내부자료
- 여성부(2004). 성 인지 예산 아·태지역 월샹 참가보고서. 2004.7.12 - 15, 필리핀 마닐라.
- 윤정숙(2003). 성 인지 예산 및 정책분석과 여성운동. 한국여성민우회편, □□젠더·예산·여성운동□□
- 윤정숙(2004). 외국의 성 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 인지 예산 분석 활동□□ 워크 샹 자료집, 2004. 6.
- 이혜경 외(2001). 성 인지적 보건복지 예산분석 및 편성·집행의 방향. 2001. 10. 보건복지부
- 차인순(2001). 법의 중립성과 성 인지적 관점. 한국여성학회 편.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 차인순(2003). 성 인지 예산정책의 가능성과 과제. 국회 여성위원회 현안 분석집 2, □□2003년도 여성정책 현안□□

- 차인순(2004). 예산을 중심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미간행),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여성단체연합(2002). 성 인지적 예산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
- 한국여성민우회(2003). 젠더·예산·여성운동
-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4). 여성장애인의 눈으로 바라 본 예산의 현황과  
과제. 여성장애인 예산 분석토론회 자료집, 2004. 6.28.
- (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정순영 외 (역). 한국여성개발원.

#### <법률안>

- 정부제출. 국가재정법안. 2004.10
- 박재완의원 대표발의. 국가건전재정법안. 2004. 12.6
- 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2003). *Opinion on Gender Budgeting* in europa.eu.int
- Ashworth, Georgina(1996). *Gender Governance: An Agenda for Change*.  
UNDP.
- Budlender, Debbi & R.Sharp(1998). *How to do a gender sensitive budget  
analysis*.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 Cha, Insoon(2005). *Gender, Budgetary Process and Policy in Korea*. Hal  
eds. *Policy Work*, Lexington Books, late Fall, 2005(forthcoming)
- DBM & NCRFW(2002). *Gender Mainstreaming and Institutionalization in  
the Budgeting process*
- Dep. of Budget and Management,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2001). *Guidelines to Implement Gender Mainstreaming and  
Institutionalization in the Existing Agency's programs, Activities and  
projects*. Joint Circular no. 2001-1.
- Elson, Diane(2005). 'Monitoring governments Budgets for Compliance

- with CEDAW-Report Highlights and Key Conclusions', UNIFEM organized session, <Government Accountability to Gender Equality through Budgets>, 7 March 2005 in [www.gender-budgets.org](http://www.gender-budgets.org)
- European Women's Lobby(2004). Gender Budgeting, in [www.gender-budgets.org](http://www.gender-budgets.org)
- Hamadeh-Banerjee, Lina(2000). "Budgets: the Political Bottom Lin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Good Governance: 21st century challenges*, UNDP.
- HM Treasury & DTI(2004). Gender Analysis of Expenditure Project - final report, July 2004 in [www.gender-budgets.org](http://www.gender-budgets.org)
- Krug, Barbara, "Gender Audit: Whim or Voice", WIDE, Brussel, Belgium, in [www.euro.org/wide/GM](http://www.euro.org/wide/GM)
- Northern Territory in AU. *Women in the Budget 2000-01*
- OECD(2001). Gender perspective on budgeting, 22nd Annual Meeting of Senior Budget Officials, Paris, 21-22 May, 2001
- Sawer, Marian(2002). "Australia: The mandarin approach to gender budgets", Budlender, Debbie & Guy Hewitt eds.(2002). *Gender Budgets Make More Cents country studies and good practice*, commonwealth secretariat.
- Sharp, Rhonda(2003). *Budgeting for equity: Gender budget initiatives within a framework of performance oriented budgeting*, UNIFEM
- Sharp, Rhonda(2000). "Future Directions in the Application of a Gender Analysis to Government Budgets", Discussi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a Gender Analysis to Government Budgets, An Inter-Agency Workshop, London April 2000.
- Swirski, Barbara(2002). "What is Gender Audit", Information on Equality and Social justice in Israel, in [www.adva.org/gender-](http://www.adva.org/gender-)

[budgetsenglish.htm](#)

The Commonwealth Secretariat(2002). “Gender-Responsive Budgets: a review of Commonwealth experiences”, provisional agenda 6.

UNDP(1997). ‘Good governance –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n UNDP, *Governanc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http://magnet.undp.org/.htm/policy/chapter>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Sensitive Budgets

Insoon Ch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the ne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sensitive budgets and to propose how to do. 'Gender sensitive budgets' as a policy agenda began after the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02. According to the second Basic Plan of Women's Policy in 2003, the institutionalization should have been prepared, but this has not happened yet.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e lack of progress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e budgets is not familiar with policy makers) and they have not regarded this agenda as an important thing. It also can be understood as a kind of gender politics. Gender sensitive budgets are an important issue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forums and they are needed to be discussed more.

In this paper, I will approach meaning of gender sensitive budgets in the budgetary process including gender analysis on budgets. First, I will redefine gender sensitive budgets and explain the ne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in the Korean situation and then I will propose how to implement them.

My proposal is to make budgets gender sensitive. The articles of law related to gender sensitive budgets (i.e. the gender sensitive budgets as budgets principle, gender sensitive budgets statement and gender sensitive performance report) must be included in the Act on finance. This will make the budgetary process more gender sensitive, and the gender sensitive budgets will be produced as a result of that.

---

\* Senior Staff Member, Women's Affairs Committee, National Assembly